

2022 SUMMER VOL. 14

POSTING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식지



CONTENTS

03

공공보건의료 Alive

장성숙 회장(인천광역시간호사회)

06

보건사업 Brief

다음에 또 감염병 팬데믹이 오면 어떡하나?

이윤정 교수(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08

Focus on 인천

간호사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

12

지원단 주요일정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발행일 2022. 06. 발행호 Vol.14 발행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편집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행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ippi.or.kr> 전화 032-580-6391

디자인·제작 DESIGN 편집 ※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소식지 <POSTING>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INTERVIEW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장성숙 회장

인천공공보건의료 유관기관 알리기

본 코너에서는 코로나19로 간호사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천 지역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간호사회를 소개합니다.

❓ 인천광역시간호사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1923년 대한간호협회 창립 이후 1946년 경기지부가 창설되었고 1983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기지부에서 분리돼 인천광역시간호사회(이하 ‘인천시간호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현재 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산하에 관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간호사회와 8개 산하단체(병원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보건교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산업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간호사의 주요 활동으로는 간호사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촉구 운동 등의 권익 보장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면허 대비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유휴간호사를 다시 일선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천·제주 취업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인천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취약계층 대상 ‘인천의료사회봉사회’ 활동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국 약 200개 이상의 간호대학에서 약 24,000명의 간호사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면허를 가진 간호사 중 실제 (종합)병원, 지역사회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간호사 비율은 약 64.1%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의료기관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가 많아 대부분 병원에서 병상 수 대비 필요한 적정 규모의 간호사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근무표 순번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시간 단위인 1 Duty를 연속으로 2번을 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근무 환경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업무 강도도 높은 반면 간호사 수는 부족하다 보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잦은 이직률은 숙련간호사 육성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을 개편했는데, 그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없는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여럿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정부가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시설로 이직하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죠. 게다가 청소, 택배, 검체 운반, 전산 작업 등 간호업무 외 부수적인 행정·기타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가중되어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정규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가 있어 정규

간호사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급에 격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감염관리수당 지급도 정부 지급기준(일당 5만원)을 준수하지 않고 의료기관 재량으로 수당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 간호사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왔죠. 마지막으로 자신으로 인해 혹시 가족,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방호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강박 등의 정신건강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❷ 특히, 공공병원이 코로나19거점전담병원으로서 감염병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간호사 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인천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요?

❶ 신규간호사의 경우 코로나19 병동에 체계적인 감염관리 교육·훈련 없이 투입되다 보니 육체적·정신적 피로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진(번아웃)이 발생했고, 이는 사직을 생각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쳐 실제 조사에서 코로나19거점전담병원 지정 이전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간호사도 업무 강도가 세지다 보니 직무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높아졌고 이는 정서적 문제로 이어졌죠.

공공병원은 코로나19거점전담병원 지정 이후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약 80%를 담당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19환자 치료를 위한 적정규모의 간호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실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상에 따른 간호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간호사 부족으로 실제 이행 할 수 없었죠. 특히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및 간호인력이 부족한 인천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힘들었죠.



❓ **열악한 간호사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등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인천시간호사회에서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저희 인천시간호사회는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법 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기존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기존 법률(‘의료법’, 1962년 제정)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질병 예방을 위한 간호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간호법’은 2005년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발의됐으나 입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2019년과 2021년 다시 국회에서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크게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기관의 책무,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 등,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등 10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사 권익 보호 관련 조항을 조금 더 소개하면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 조항으로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 임금, 처우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한 기본지침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조항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등으로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나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 운영 중심이라 다양화되고 전문화 된

간호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여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입니다.

❓ **인천 지역의 간호사 권익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보건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유관기관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할까요?**

❗ 현재 인천시 군구 공공기관의 간호직 비중(약 50%)에 비해 시도 비중(약 20%)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간호직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천시는 간호직 공무원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인천시가 지역사회 수요에 맞게 간호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집행부가 충실히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간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간호부서의 현재 역할이 병원 규모와 기능 대비 적정인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간호부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나라가 2025년이 되면 65세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돌봄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핵심 인력인 간호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감염병 판데믹이 오면 어떡하나?

(지역공공간호사제도의 도입, 필요한가?)

글 이윤정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6월이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지난 달부터 학교는 학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실로 2년 몇 개월만에 학교에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까르륵 거리는 청명한 고음이 귀를 울린다. 학생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앉은 아이들을 보는 것도 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수업 중에 앞자리에 앉아 눈빛을 빚내며 집중하는 아이들과 맨 뒷자리에서 아예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공존하는 이 강의실에서 있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 참으로 어색하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19는 물러가나보다.

그러나 지난 2년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혹했다.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자영업자들의 생계 고충도 물론 힘들었지만, 휴일도 없이 환자 치료와 검진 업무에 투입된 의료인들의 고군분투는 온 국민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는 ‘감사챌린지’를 유발할만큼 감동적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활약상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었는데, 마스크와 방호복을 몇 겹씩 겹쳐 입고 긴 시간 화장실도 못가며 음압병실에서 감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 초기에 대구 지역에서 폭발적인 환자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달려온 간호사들, 이를 만화로 그려내어 간호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에게 알려준 또 다른 간호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간호사들의 고생과 헌신에 감동하고 감사해하는 국민들의 얘기가 넘쳐났다.

한편 2020년 11월 국회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어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료인 면허 취득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법안을 전제로 보건복지부는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21~2025년)에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포함시키고 2023년부터 250여명 내외의 지역공공간호사를 배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매일노동뉴스 2021.6.29.). 이러한 논의는

감염병 위기의 상황에서 특히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설득력을 얻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간호사는 41만 4천명이 배출되어 있지만 의료기관 활동자는 21만 5천명으로 면허자의 51.9%만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활동간호사 수는 인구 천명당 4.15명 수준으로 OECD 평균(2017년 기준)인 7.5명에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다. 활동간호사 수도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간호사의 민간기관, 수도권 편중 현상이다. 간호대의 80%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졸업생의 52%가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어 지역별 간호사 불균형이 심각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수준은 약 1,000~1,200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이 닥치니 정부는 지역공공간호사 양성을 특단의 조치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간호사 인력부족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을 어길시 면허를 박탈한다는 강제조항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어떤 제도라는 것이 하나의 우려도 없이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좋은 제도라고 정착된 제도들도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보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공공간호사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역시 다양한 걱정을 안고 있지만, 또한 올해 이 제도 하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은 간호대학생이 불과 8명 뿐이라는 사실도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감염병 판데믹의 위협,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을 고려해보건대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꼭 정착될 필요가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시골에서도 간호사가 넘쳐나고, 이직하는 간호사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성도 당연히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동시에 지역공공간호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인천지역은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몇 년전 인천보훈병원도 문을 열었다.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간호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역사회간호학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보건과 공공의료의 인식을 좀 더 키워주는 교육을 통해 졸업하면 지역보건에 투신하겠다는 학생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오늘도 그런 바람을 안고 강단에 오른다.

간호사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

배경

국내 간호사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분야 인력관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간호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객관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OECD 보건통계(2021년)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4.2명으로 독일(11.8명), 영국(6.6명), 일본(9.4명), 캐나다(7.1명) 보다 낮았으며, OECD 평균(7.9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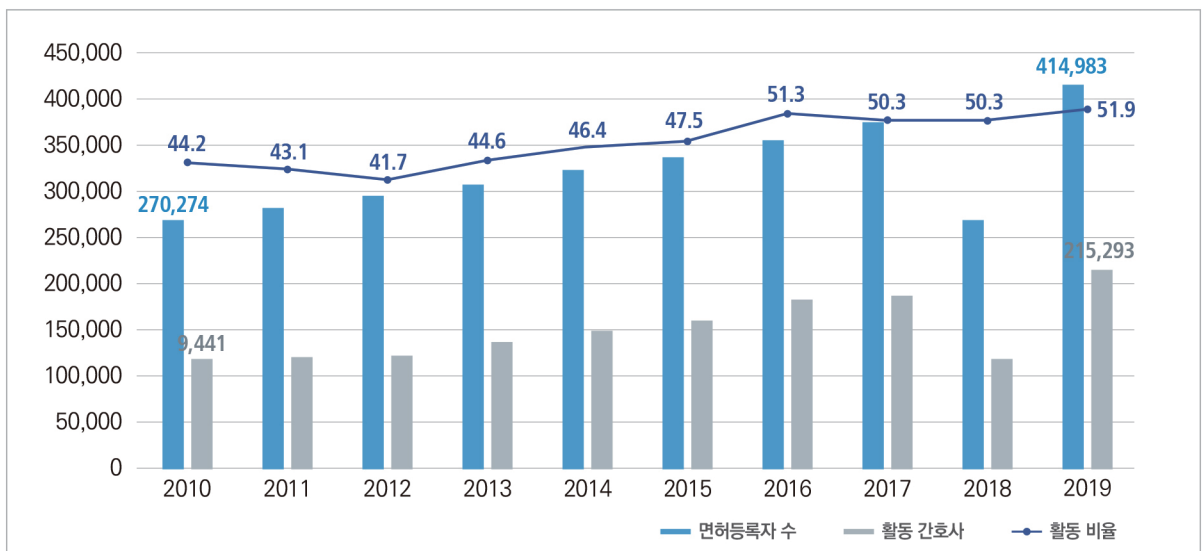
〈표 1〉 OECD 주요 국가의 간호사 인력 현황('19년)

단위 : 명/인구 1,000명당

구분	한국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OECD 평균
간호인력 전체	7.9	14.0	8.2	11.8	10.0	9.4
간호사	4.2	11.8	6.6	9.4	7.1	7.9

※ 출처 :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

※ 일본은 2018년 수치임



[그림 1] 국내 간호사 면허 등록 대비 활동 간호사 현황



국내 간호사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문제이지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 중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 비중이 전체 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쳐 더욱 간호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20년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간한 통계자료(‘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간호사 수는 41만 4,983명이지만 실제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21만 5,293명으로 전체의 약 52%에 불과하였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그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헌신했던 간호사들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간호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림 2] 간호사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요구 활동

주요 동향

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문’ 이행 노력

2021년 9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감염관리수당 신설, 간호등급차등제 시행 등 간호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계획을 담은 9·2노정합의문을 마련하였다. 해당 합의문 중 간호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종별 인력기준** :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제도화 추진
- **간호등급제** :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고, 구체적 시행 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이를 위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 등이 참가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
- **교육전담간호제** :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
-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
- **교대제 개선** : 예측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 시행

‘9·2노정합의문’ 마련 이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1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였다. 협의체는 직접당사기관 외 지방의료원연합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고, 매월 회의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간호사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올해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2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여 4월 29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7일 보건의료날에는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9·2 노정합의문’ 이행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림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9·2노정합의문 관련 주요 활동

②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노력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법률(안)은 현행 의료법 등 기존 관련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 중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 전문인력 양성·수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2021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당 국회의원이 간호 관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법률 제정을 위해 2022년 1월 7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질 높은 간호서비스와 간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간호정책 수립을 통해 간호인력 배치 및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열어 해당 법률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대한간호협회 움직임에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 의료노조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총 보건의료 관련 1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해당 법률안에 명시된 업무영역이 해당 단체의 업무 영역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이 국회에서 입법되기 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주요 활동



[그림 5]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움직임

추진성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광역 차원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2년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차원에서 2021년 추진실적 작성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 기간 : 2022년 1월 31일(월) ~ 5월 27일(금)

인천광역시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2021년 시행 결과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인천보훈병원을 포함한 인천시 소재 공공의료기관 7개소를 대상으로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관유형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기간 : 2022년 1월 31일(월) ~ 5월 27일(금)

지방의료원 공익적자 지원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공공보건의료 재단 및 지원단이 함께 모여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세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인천광역시제1시립노인치매 요양병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인천시 요청으로 인천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수탁기관 제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인천시청 본관 지하1층 중회의실

2022년 제2차 전국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 참석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주최한 2022년 제2차 연석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의 향후 운영 회복방안 및 각 지역이 당면한 공공보건의료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원 부단장은 인천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14:30 ~ 29일(금) 12:00
- 장소 : 충남대학교병원 관절염 재활센터 3층 대강당(온라인 병행)

인천적십자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간담회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인천적십자병원을 관내 남부권(연수구, 남동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권역책임의료기관, 중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 모여 인천적십자병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5월 2일(월) 오후 2시
- 장소 : 인천시청 본관 지하1층 중회의실

인천광역시-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동 워크숍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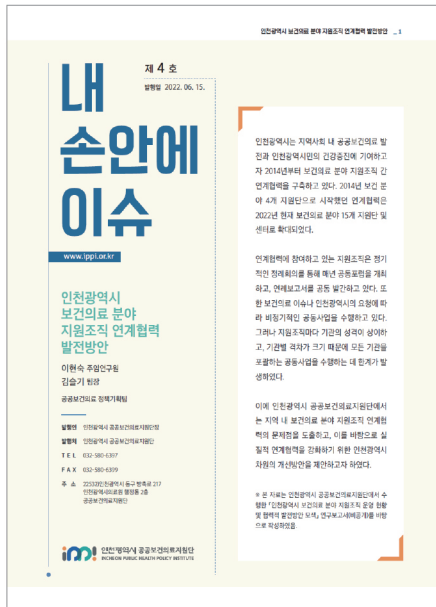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사연구팀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수립 시기를 맞아 각 지원단의 기술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기술지원 방법 및 노하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두 지원단의 2022년 연구과제 및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10:00~17:00

• 장소 : 르호봇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오피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성과물 발간



「내 손안에 이슈-인천광역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조직 연계협력 발전방안」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11개 기관)가 공동으로 「한 눈에 보는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핵심지표」를 발간하였습니다. 각 성과물의 전문은 지원단 홈페이지(<http://www.ipp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향후계획

공공·책임의료기관 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운영

공공·책임의료기관 실무자들이 기관의 사업이나 교육, 연구 성과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작성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2022년 7월 21일(목)

장소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지원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 인천시 집행부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구성된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일정 2022년 7월~8월

장소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공공의료기관 대상 운영평가 지원

인천시 소재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평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정 2022년 7월~8월

대상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인천 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지원단 및 센터 정례회의 개최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15개 기관) 기관장 정례회의(1회), 실무자 정례회의(1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연계협력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2022 인천 공공보건의료 포럼', 연례보고서, 섬 지역 보건의료사업 등의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정 2022년 7월~8월

장소 미정

2022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차 운영위원회

인천시, 시의회, 공공보건의료기관,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모여 2022년 상반기 사업결과, 하반기 사업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정 2022년 8월

장소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 및 군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인천시, 시의회, 공공보건의료기관,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모여 2022년 상반기 사업결과, 하반기 사업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정 2022년 8월~2023년 4월

대상 인천시 및 10개 군구

